

EU 확대에 따른 지역정책 및 지역격차 변화

문남철*

요약: 유럽연합의 지역정책은 지리적 확대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소득 회원국과 지역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고 신규회원국의 가입을 회유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 결과 지역정책의 목표와 지원대상지역은 확대되고 기금지원은 광범위하게 분산되었다. 최근 유럽연합은 저소득의 중·동부유럽국가의 대규모 가입에 따라 지역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정책을 변경하였다. 우선 광범위하게 분산된 지역정책의 목표를 크게 통합하고, 지역구분에 의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지원대상지역을 순차적으로 축소시키는 정책을 도입하였다. 또한 확대된 지리적 영역에서 지역간 협력을 촉진하여 지역간 결속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지역간 발전격차는 회원국간 격차는 수렴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거시 지역간 격차는 극화현상을 보이고 회원국 국내 지역격차는 심화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유럽연합의 지역정책이 회원국간 경제격차의 완화에는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거시지역과 국내 지역에는 격차해소를 위한 지역정책에도 불구하고 발전격차를 증가시킬 수밖에 없는 입지측면의 지역간 차별성으로 인해 경제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주요어: 유럽연합, 지역정책, 지역격차

1. 서론

1957년 서부유럽 6개국에 의해 유럽경제공동체(EEC)로 출범한 유럽연합(EU)은 그동안 서부유럽-남부유럽-북부유럽-중·동부유럽으로 이어진 7차에 걸친 지리적 확대로 27개 회원국에 약 4억 9천만 명의 세계 최대 단일경제권이 되었다. 단일경제권의 지리적 확대로 회원국은 시장규모의 확대에 따른 규모의 경제실현과 저렴한 노동인력 확보를 통한 생산비용의 절감, 자유로운 교역과 자본이동에 따른 자금자족적 경제체제의 강화 등 시장 확대효과를 누리게 되었다. 그러나 단일시장의 지리적 확대는 소득격차를 지닌 다양한 국가들을 단계적으로 통합함으로써 지

역간 경제격차를 크게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지리적 확대과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점 중의 하나는 확대에 따른 지역간 발전격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여 통합을 심화시켜 나갈 것인가이다. 지역간 발전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그 격차가 심화되면 단일경제권의 확대에 의한 긍정적인 효과보다 사회적 갈등과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확대 등의 부정적인 효과를 발생시켜 통합을 저해할 수도 있다. 이러한 우려에서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공동체 설립 초기부터 지역간 발전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공동지역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¹⁾. 이것은 유럽연합의 완전한 통합은 경제적 측면에서 경쟁력 확대뿐만 아니라 공간적인 측면에서 지역간 균형

*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강사

적 발전이 도모될 때 달성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은 그동안 지리적 영역을 확대시키는 동시에 발생하는 지역간 발전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지역정책을 모색해 왔다.

국내에서도 유럽연합의 지역정책에 관한 많은 연구(김광익·장철순, 2000; 이중서, 2007; 김은경, 2009)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지리적 확대에 따른 지역정책의 변화와 지역격차의 시계열적 변화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유럽연합의 지리적 확대와 이에 따른 지역정책의 변화와 지역간 발전격차의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세부적인 분석내용으로는 유럽연합의 지리적 확대에 따라 지역정책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최근 소득수준의 커다란 격차를 지닌 중·동부유럽국가의 대규모 가입에 따라 정책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지역간 경제격차의 시계열적 변화를 1인당 GDP를 지표로 거시 지역간, 회원국간, 회원국의 국내 지역간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지역격차 완화를 위한 유럽연합의 지역정책의 효율성을 파악할 수 있다.

분석방법은 지리적 확대에 따른 지역정책의 변화와 지역간 경제격차의 변화를 가장 간결하고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를 도표화 및 지도화하여 설명하는 서술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기존의 국내·외 문헌과 유럽연합 인터넷 홈페이지(www.europa.eu.int)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는 지역간 경제격차의 지표로 1인당 GDP만을 사용함으로써 지역격차를 명확하게 분석하지 못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음을 밝혀둔다.

2. 이론적 고찰

경제통합에 따른 지역격차의 문제는 경제통합으로

지역간 경제력의 격차가 축소된다는 ‘수렴(convergence) 이론’과 격차가 더욱 확대된다는 ‘발산(divergence) 이론’으로 크게 양분된다. 시장의 기능에 기초한 신고전적 이론에서는 지역격차는 일시적인 현상이며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체제가 유지되면 지역간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에 의해 지역격차는 해소된다고 보고 있다. 경제통합으로 인한 지역격차문제도 시장통합으로 지역간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지면 생산요소의 효율적인 지역적 분배로 지역격차는 해소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주변부 국가 및 지역은 자본의 유입과 교역의 확대로 중심부 국가 및 지역에 비해 빠르게 성장함으로써 지역간 경제력의 격차는 감소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시장통합과 더불어 지역격차 완화를 위한 지역정책은 불필요하다²⁾.

이에 반해 지역의 관성에 바탕을 둔 누적적 인과이론(cumulative causation theories)에서는 지역간 경제력의 격차는 발전초기부터 존재하며 일단 경제력의 선발우위를 차지하는 지역은 규모의 경제와 같은 외부경제효과에 의해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게 되며 그렇지 못한 지역은 경쟁력이 약화되어 지역간 경제격차는 더욱 심화된다고 보고 있다. 시장통합으로 인한 지역격차에 대해서도 경제통합으로 기업간의 경쟁이 심화되면 기업은 기술과 노동자의 생산성에 더욱 의존하게 되며, 이 경우 성장의 선발이득을 지닌 중심부 지역이 구심점으로 작용하여 기업을 유인함으로써 높은 성장을 이루기 때문에 지역격차는 더욱 심화된다고 주장한다. 경제통합으로 지역간 경제력의 격차가 확대되는 이유로는 우선, 시장 확대에 따른 규모의 경제는 성장의 선발이득을 지닌 중심부 지역으로 집적화를 유도하며 둘째, 첨단기술과 노동자의 생산성에 대한 의존은 숙련노동력과 첨단기술을 쉽게 획득할 수 있는 중심부 지역으로 집적화를 유도하며 셋째, 산업내(intra-industry) 교역의 확대로 중심부 국가의 시장지배력 입지가 강화되며 넷째, 주변부 지역의 외부경제효과 부재는 지역 경쟁력을 약화시키며 다섯째, 선별적 노동이동은 중심

부 지역으로 우수한 인적자본을 유인하여 주변부 지역의 인적자본의 축적을 어렵게 하며, 마지막으로 경제통합으로 주변부 국가는 경제상황의 위기 시에 화폐 및 금융정책 등 거시경제수단의 활용이 제한되는 점 등을 들 수 있다(Armstrong, 1995). 따라서 시장통합과 더불어 지역격차를 감소시키기 위한 인위적인 지역정책은 필요하다.

유럽연합은 그동안 시장통합의 확대와 더불어 지역간 경제격차를 감소시키기 위해 인위적인 지역정책을 실행해 왔다. 유럽연합의 지역정책과 지역격차에 대한 논의는 지역정책을 통해 지역간 발전격차가 완화되었는가 아니면 지역정책에도 불구하고 확대되었는가에 있다. 이에 관한 연구는 서로 상반된 결론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지역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역간 불균형은 지속되고 지역간 극화(polarization) 현상은 더욱 확대되었다는 연구들(Armstrong, 1995; López-Bazo *et al.*, 1999; Boldrin et Canova, 2001; Le Gallo et Ertur, 2003)과 지역정책으로 지역격차가 감소되었다는 연구들(Bachtler et Turok, 1997; European Commission, 2006)이 있다. 그리고 지역정책으로 회원국간 경제격차는 완화되었지만 회원국의 국내 지역격차는 오히려 크게 확대되었다는 연구들(Sapir *et al.*, 2004; Capron, 2007; Heidenreich and Wunder, 2008; Geppert and Stephan, 2008)이 있다. 그러나 회원국간 경제격차의 완화가 구조기금 지원을 바탕으로 한 효율적인 지역정책의 결과인지 아니면 시장통합에 따른 경제효과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구별하기가 어렵고, 미시지역에서의 격차 요인도 충분한 자료의 부족으로 정확한 요인의 분석이 어렵다고 지적되고 있다(Sapir *et al.*, 2004).

3. 지리적 확대와 지역정책의 변화

1957년 서부유럽 6개국(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에 의해 창설된 유럽연합은 그동안 지리적 영역을 서부유럽(영국, 덴마크, 아일랜드(1973))-남부유럽(그리스(1981), 스페인과 포르투갈(1986))-북부유럽(동독지역(1990), 스웨덴과 핀란드, 오스트리아(1995))-중·동부유럽(중·동부유럽 10개국(2004), 루마니아와 불가리아(2007))으로 확대하였다. 지리적 확대와 더불어 유럽연합은 확대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간 발전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지역정책을 실행시켜 왔다.

1) 창설 및 서부유럽 확대와 지역정책

1957년 6개 회원국이 체결한 로마조약에서 회원국들은 경제통합의 전제조건으로 '낙후지역의 격차를 해소하여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 할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낙후지역개발을 위한 실질적인 공동정책의 토대가 마련된 것은 1975년 유럽지역개발기금(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ERDF)이 설립된 이후이다. 1970년대 중반 이전까지 회원국들은 지역격차 문제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지만 지역격차 문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이탈리아 남부지역만의 문제로 공동체 차원에서 커다란 관심을 갖지 못하였다. 다만 시장통합을 위해 지역격차 해소할 목적으로 1958년 유럽사회기금(European Social Fund, ESF)과 1964년 유럽농업지도 및 보장기금(European Agricultural Guidance and Guarantee Fund, EAGGF)이 설립되었으나, 이 시기 회원국들의 주요 관심사는 공동농업정책(CAP)이었기 때문에 지역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정책은 공동정책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1973년 영국과 덴마크, 아일랜드의 가입으로 지역격차가 확대되면서 낙후된 아일랜드와 영국의 북부지역, 이탈리아 남부지역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석유파동으로 석탄·철강·조선·섬유·의류 등 전통산업지역의 쇠퇴로 지역격차가 확대되면서 지역정책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동체 차원의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1975년

낙후지역과 산업구조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유럽지역개발기금(ERDF)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지역개발기금의 지원기준과 지원대상지역의 선정기준이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에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기금지원은 지역문제나 투자계획에 대한 검토 없이 정해진 기금이 회원국별로 할당되어 지원되었다.

2) 남부 및 북부유럽 확대와 지역정책

1980년대 경제발전의 차이를 지닌 그리스(1981년), 포르투갈과 스페인(1986년)이 가입하면서 공동체 차원의 지역정책과 기금지원방식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이 시기 단일시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아일랜드와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 상대적으로 경제수준이 낮은 회원국들은 단일시장의 형성으로 경제활동이 경제력이 큰 중심부 국가에 집중되어 지역격차가 확대될 것을 우려하여 공동체 차원의 적극적인 지역정책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저소득 회원국들의 요구에 따라 낙후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유럽지역개발기금(ERDF), 유럽사회기금(ESF), 유럽농업지도 및 보증기금(EAGGF) 등 구조기금 규모가 크게 증액되는 동시에 저소득 회원국의 환경개선과 교통망 구축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결속기금(Cohesion Fund)이 1993년에 창설되었다. 그리고 스웨덴과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부유럽 국가의 가입 예정에 따라 수산업부문의 경쟁력 제고와 어촌지역의 개발을 위한 수산업 지도를 위한 재정수단기금(Financial Instrument for Fisheries Guidance, FIFG)이 1993년에 설립되었다. 다시 말해, 구조기금 창설과 구조기금의 증액은 단일시장의 형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저소득 회원국들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고 신규회원국의 유럽연합 가입을 회유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정치적 합의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연합은 지리적 영역을 확대하면서 확대된 회

원국을 대상으로 유럽연합 지역정책의 주요수단인 구조기금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그동안 4차(1989-1993년, 1994-1999년, 2000-2006년, 2007-2013년)에 걸친 구조기금 개혁을 단행하였다. 1차 프로그래밍(1989-1993년)에서는 저소득 회원국들의 가입과 사양산업지역의 확대로 지원대상지역이 넓어짐에 따라 지역정책의 목표와 지원대상지역을 제한하기 위한 선정기준이 마련되었다. 지역정책의 목표는 낙후지역 개발(목표1)과 사양산업지역 개발(목표2), 장기실업 및 청년실업 해소(목표3, 목표4), 농업구조 현대화(목표5a)와 취약한 농촌지역 개발(목표5b)로 제한하였다. 그리고 이 목표에 따라 지원대상지역이 1인당 GDP와 실업률을 기준으로 선정되었다. 낙후지역개발 지원대상지역 선정기준은 1인당 GDP가 유럽연합 평균 GDP의 75% 이하인 지역들이며 대부분 신규회원국인 아일랜드와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의 전 지역과 기존 회원국의 주변지역들이 선정되었다. 사양산업지역개발 지원대상지역 선정기준은 석탄·철강·섬유·조선 등 전통산업의 사양화로 지역경제가 쇠퇴하고 실업률이 유럽연합 평균보다 높은 지역들로 회원국 전역에서 골고루 선정되었다. 그리고 결속기금(Cohesion Fund) 지원대상회원국의 선정기준은 구매력 기준 1인당 GNP가 유럽연합 평균의 90% 이하인 회원국으로 스페인과 포르투갈, 아일랜드가 사회간접시설 부문의 개선을 위해 선정되었다.

2차 프로그래밍(1994-1999년)에서는 인구밀도가 낮고 수산업 비중이 높은 스웨덴과 핀란드, 노르웨이 그리고 오스트리아와 스위스의 가입예정³⁾과 새로운 산업 및 생산체계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지역정책의 목표가 다소 수정되었다. 목표1(낙후지역 개발)은 이전의 지역선정기준과 커다란 변동을 보이지 않았으나, 목표2(사양산업지역 개발)는 해당지역이 어촌지역까지 확대되었다. 목표3은 이전의 목표3(장기실업)과 목표4(청년실업)가 통합되어 '장기실업 및 청년실업 해소'로 변경되었다. 목표4는 '산업 및 생산체계변화에 대한 노동자의 적응지원'이 새로이 추가

표 1. EU 확대와 지역정책 변화

계획 구분	1989-1993년 (EU12)	1994-1999년 (EU15)	2000-2006년 (EU15/EU25)	2007-2013년 (EU27)
신규 회원국	동독지역(1990년)*	스웨덴·핀란드· 오스트리아(1995년)	중·동부유럽 10개국(2004년)**	불가리아·루마니아 (2007년)
목표	1. 낙후지역개발 2. 사양산업지역개발 3. 장기실업 해소 4. 청년실업 해소 5. a) 농업현대화 b) 농촌지역개발	1. 낙후지역개발 2. 사양산업지역개발 3. 장기실업 및 청년실업해소 4. 산업 및 생산체계 변화에 노동자 적응 5. a) 농·어업현대화 b) 농촌지역개발 6. 인구희박지역개발	1. 낙후지역개발 2. 구조적 문제지역의 경제·사회적 구조전환 3. 교육, 훈련 및 고용정책의 현대화	1. 수렴 2. 지역경쟁력 및 고용 3. 유럽 지역간 협력
유럽연합 주도계획	Interreg, Regis, Envireg, Regen, Telematique, Stride, Euroform, Now, Horizon, Rechar, Prisma, Leader, Star, Valoren, Resider, Renaval	IntergII, Regis II, SME, Urban, Resider II, employment, Rechar II, Konver II, Retex, Textile-clothing, Portugal, Leader II, Pesca, Peace	Interreg III, Equal, Leader+, Urban	
수혜인구	1. 21.7% 2. 16.8% 5. a) 5%	1. 25.0% 2. 16.3% 5. b) 8.8% 6. 0.4%	1. 22.2%(EU15) 2. 18%(EU15)	1. 35.0% (구조기금 제외)
비고	낙후지역지원 본격화 기금중액과 결속기금 설립 수산업기금 설립	어업 및 어촌지역지원 인구희박지역 지원	목표의 축소, 지원지역 축소, 유럽연합주도계획이 목표로 흡수 통합	

주: * 1989년 이전 가입국: 프랑스·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벨기에·룩셈부르크(1957년),
영국·덴마크·아일랜드(1973년), 그리스(1981년), 포르투갈·스페인(1986년)

** 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헝가리·슬로베니아·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몰타·키프로스(2004년)

자료: European Commission, 1995, 2000, 2007

되었으며, 목표5(농·어업구조의 현대화와 농·어촌 개발)는 어업의 현대화와 어촌지역의 개발까지 확대되었다. 그리고 신규가입 예정회원국을 배려하여 1km²당 거주인구 8명 이하의 '인구희박지역에 대한 구조개선 지원' 이 목표6으로 추가되었다.

3차 프로그래밍(2000-2006년)에서는 중·동부유럽국가들의 대규모 가입예정과 광범위하게 분산된 기금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정책의 목표

를 6개에서 3개로 통합하고 유럽연합 주도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역정책의 목표에 포함시켰다. 목표1은 이전의 목표1(낙후지역)과 목표6(인구희박지역)이 통합되어 '낙후지역 개발 및 구조조정'으로 변경되었으며, 목표2는 이전의 목표2(사양산업지역)와 목표5b)(농촌지역)가 통합되어 '구조적 문제지역의 경제·사회적 구조전환'으로 변경되었다. '교육·훈련 및 고용정책의 현대화' 지원이 목적인 목표3은 이전

의 목표3(장기실업 및 청년실업)과 목표4(노동자 적응)가 통합되었다. 그리고 이전의 목표5a(농어업)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새로운 목표1과 목표2 지역에 흡수되었다. 즉 유럽연합은 지리적 영역을 확대하면서 확대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확대된 회원국을 대상으로 기금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정책의 목표와 지원대상지역의 선정기준을 변화시켜 왔다.

3) 중·동부유럽 확대와 지역정책: 제4차 프로그래밍(2007-2013년)

새로운 저소득 회원국 그룹을 출현시킨 중·동부 유럽으로의 확대는 유럽연합의 지역정책을 매우 복잡하게 만들었다. 기존 회원국의 평균 1인당 GDP의 40%에 불과한 중·동부유럽국가의 가입으로 가장 부유한 지역과 가장 빈곤한 지역의 1인당 GDP 격차는 1:5(EU15)에서 1:13(EU27)으로 크게 확대되었고 1인당 평균 GDP는 약 18%가 감소하였다. 유럽연합 평균 1인당 GDP의 75% 미만의 지역 수는 기존 15개 회원국에서 전체 인구의 18%에 해당되는 48개 지역이었으나 27개 회원국으로 확대되면서 전체 인구의 26%에 해당되는 67개 지역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67개 지역 가운데 기존 회원국의 지역은 18개 지역만이 잔존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유럽연합의 확대로 기존 회원국의 30개 지역은 저개발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기금지원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은 확대로 인한 기존 회원국의 저개발지역의 배제 문제를 해결하고 신규회원국들과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절충안을 마련하였다. 우선 신규회원국들과의 결속을 위해 기존의 기금 지원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지원기준이 적용될 경우 기존 회원국의 저개발 지역이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기존 목표1의 지역은 일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유럽연합은 확대된 영역에서 회원국간 협력을 강화하고 확대된 회원국에 대한 효율적인 기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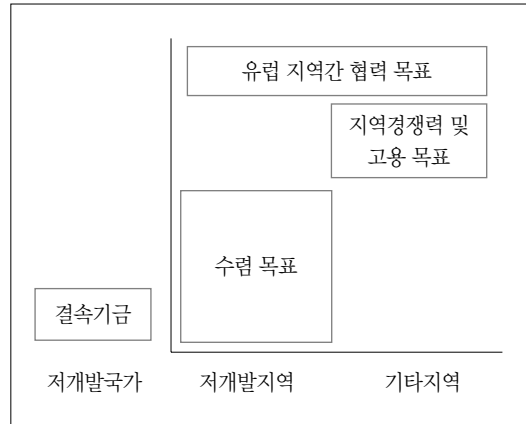


그림 1. 제4차 프로그래밍 지역정책목표와 대상지역

원을 위해 제4차 프로그래밍(2007-2013년)에서 지역정책의 목표를 수렴, 지역경쟁력 및 고용, 유럽 지역간 협력으로 단순화하였다.

‘수렴’ 목표는 이전의 ‘목표1’(낙후지역)을 대체한 것으로 저개발 지역과 저개발 회원국의 개발을 지원하여 해당 지역 및 회원국이 유럽연합의 평균에 도달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원대상지역의 선정기준은 1인당 GDP가 유럽연합(EU25) 평균의 75% 미만인 지역들과 기존 회원국(EU15) 평균의 75% 미만이었던 지역들이 유럽지역개발기금과 유럽사회기금의 지원을 받는다. 그리고 1인당 GNI가 유럽연합(EU25) 평균의 90% 이하인 회원국과 기존 회원국(EU 15) 평균의 90% 이하였던 회원국이 결속기금의 지원을 받는다.

‘지역경쟁력 및 고용’ 목표는 이전의 목표2(구조적 문제지역)와 목표3(고용정책)이 통합된 것으로 지역경쟁력과 고용에 문제가 있는 지역의 개발을 지원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NUT2⁴⁾ 지역 수준에서 ‘수렴’ 목표에 해당되지 않은 모든 지역들과 이전 목표1(낙후지역)에 해당되며 1인당 GDP가 기존 회원국 평균의 75%를 넘는 지역이 유럽지역개발 기금과 유럽사회기금의 지원을 받는다. 그러나 ‘수렴’과 ‘지역경쟁력 및 고용’의 두 목표에서 기존 회원국의 기준에 의

표 2. 제4차 프로그래밍(2007-2013년) 지역정책 목표와 지원대상지역 선정기준

목표	선정기준	지원기금
수렴	1인당 GDP*가 EU25 평균의 75% 미만인 지역	ERDF, ESF
	EU15 평균 GDP의 75% 미만인 지역, 일시적 지원(단계적 폐지)	
	GNI가 EU25 평균의 90% 미만인 회원국	Cohesion Fund
	EU15 평균 GNI의 90% 미만인 회원국, 일시적 지원(단계적 폐지)	
지역경쟁력 및 고용	수렴목표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NUT1 또는 NUT2 지역	ERDF, ESF
	이전 목표1에 해당되며 1인당 GDP가 EU15 평균의 75%를 넘는 NUT2 지역, 일시적 지원(단계적 폐지)	
유럽 지역간 협력	접경지역 협력: 국경에 위치한 NUT3 지역	ERDF
	국가간 협력: 지정된 13개** 협력 지역	
	지역간 협력: 협력네트워크와 경험을 상호교환 하는 모든 지역	

주: * GDP와 GNI는 구매력 환산 기준임.

** 북부주변, 발틱해, 유럽 북서부, 북해, 대서양 연안, 유럽 남서부, 알프스 지역, 유럽 중부와 동부, 지중해, 유럽 남동부, 아조레스-마디라-카나리아, 인도양 지역, 카리브 해 지역

자료: European Commission, 2007

해 지원을 받는 지역들은 일시적인 특별지원의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지원이 축소된다.

마지막으로 ‘유럽 지역간 협력’ 목표는 접경지역간·국가간·지역간 협력증진을 주목적으로 하며 이전의 유럽연합 주도의 프로젝트(Interreg III, Urban II, Equal, Leader+)를 통합하였다. 지원대상은 국경 지역에 위치한 NUT3에 해당하는 접경지역들간의 협력과 유럽연합에서 지정한 13개 지역에서의 국가간 협력, 그리고 유럽연합의 모든 지역에서의 지역간 협력 및 경험 교류 네트워크는 유럽지역개발기금의 지원을 받는다. 즉, 저소득 회원국의 대규모 가입에 따라 유럽연합의 지역정책은 지역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지역구분에 의해 광범위하게 분산된 지역정책의 목표를 단순화하고 지원대상지역을 순차적으로 축소시키는 정책을 도입하였다. 또한 확대된 영역에서 지역간 협력을 촉진하여 지역간 결속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4. 지역간 경제격차의 변화

유럽연합은 지리적 확대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간 경제격차를 감소시키기 위해 다양한 지역정책을 실행해왔다. 실행된 지역정책이 효율적일 경우 지역간 경제격차가 완화되지만 비효율적일 경우 지역간 경제격차가 확대되거나 특정 지역에 경제력이 편중되는 극화(polarization)현상을 나타내게 된다.

1) 거시지역의 경제격차 변화

지리적 확대과정에서 유럽연합의 경제지역은 중심부 지역과 (준)주변부 지역으로 나누어지는 지역적 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풍부한 자원과 넓은 소비시장을 바탕으로 일찍이 산업화가 진행된 블루벨트(영국의 미들랜드-베네룩스 3국-프랑스 북부-독일 남서부-이탈리아 북부) 지역은 유럽연합의 중심부 지역을 형성하고 있다. 지리적 확대과정에서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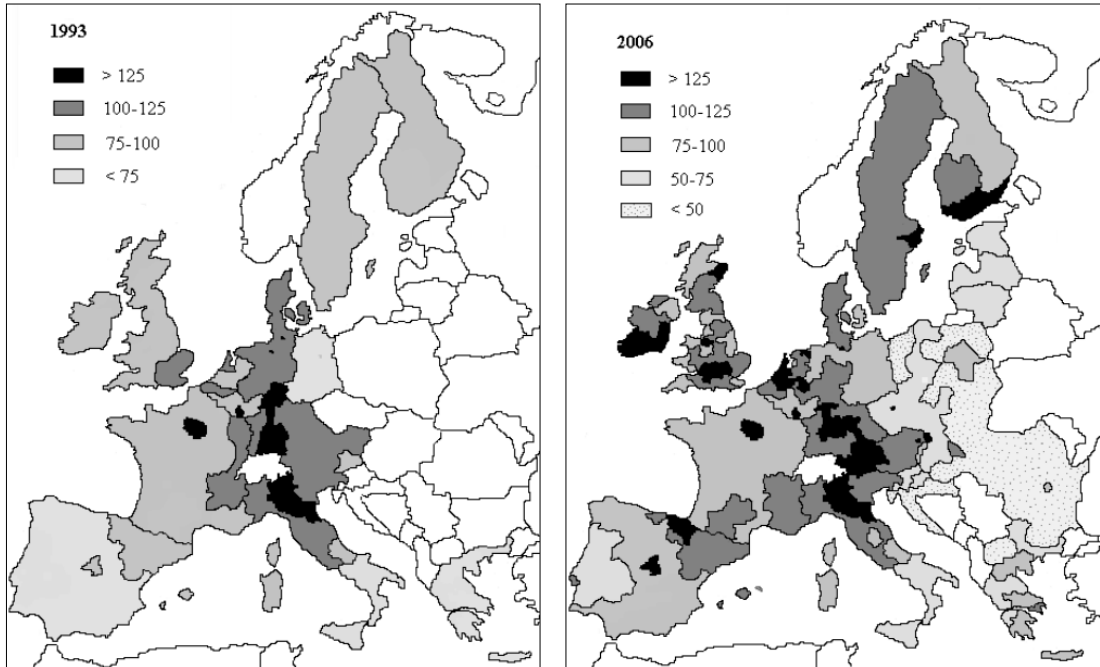


그림 2. 1인당 GDP의 지역간 격차 변화

주: NUTS 2 기준, 1993년(EU15=100), 2006년(EU27=100)

자료: European Commission, 1996, 2009

의 선발이득을 지닌 중심부 지역은 규모의 경제와 거래비용, 기업간 연계성, 시장규모, 노동력 질 등 우월한 입지여건으로 경제력을 더욱 집중시키고 있으며 주변부의 일부 지역은 가입 이후 기금지원과 자본유입으로 성장한 지역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지역은 더욱 주변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70-1980년대 경제력의 격차를 지닌 아일랜드와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의 가입으로 경제지역은 기존의 중심부 지역과 신규회원국의 주변부 지역으로 변화되었다. 1993년 중심부 지역의 1인당 GDP는 유럽연합 평균(EU15=100) 이상의 높은 수준이었으나 아일랜드와 영국 북부,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남부 등 주변부 지역의 1인당 GDP는 평균 이하의 낮은 경제수준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이들 지역의 일부지역은 가입 이후 구조기금 지원과 대규모의

자본유입, 교역의 증가와 함께 빠르게 성장 발전하여 새로운 준 주변부를 형성하였다. 특히 아일랜드와 영국의 웨일즈와 스코틀랜드, 스칸디나비아 반도 남부, 지중해 연안의 지역은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2006년 1인당 GDP는 유럽평균 이상의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하지만 포르투갈과 이탈리아 남부, 그리스 지역은 경제력이 크게 개선되지 못한 채 유럽평균 이하 수준을 나타내었다.

최근 경제력이 매우 낮은 중·동부유럽국가의 대규모 가입으로 유럽연합의 경제지역은 중심부 지역과 준 주변부 지역, 주변부 지역으로 변화되었다. 2006년 중심부 지역의 1인당 GDP는 유럽 평균(EU27=100) 대비 125% 이상의 높은 수준이며 1993년과 비교하여 중심부 지역의 소득수준은 크게 향상되었다. 준 주변부 지역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최근 빠른

성장으로 유럽 평균 이상의 소득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최근 가입한 중·동부유럽 회원국의 경제성장은 수도를 포함한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있으며, 나머지 대부분 지역들의 1인당 GDP는 유럽평균의 50% 미만에 불과하다. 즉 단일시장의 지리적 확대는 중심부 지역에 지속적인 경제력의 증대를 가져왔으며 통합에 따른 자본의 이동과 교역의 증가로 주변부의 일부 지역은 빠르게 성장 발전하여 새로운 준 주변부 지역을 창출하였다. 그러나 기타 주변부 지역의 경제력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더욱 주변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2) 회원국간 경제격차의 변화

지리적 확대와 더불어 경제발전의 격차를 지닌 국가들이 가입하면서 회원국간 경제력의 격차는 크게

확대되었다. 2006년 기준 영국과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서부유럽 회원국의 1인당 GDP는 유럽연합(EU27=100) 평균 대비 110-130%의 높은 수준이며 스페인과 포르투갈, 그리스 등 남부유럽 회원국은 77-105%, 최근에 가입한 중·동부유럽 회원국은 32-88%로 소득수준이 현저히 낮다.

그러나 회원국간 1인당 GDP의 격차는 회원국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1980년대 중반 이후 남부유럽 및 중·동부유럽 회원국들의 유럽연합 평균을 능가하는 1인당 GDP의 성장으로 점차 수렴되는 경향을 보였다. 스페인과 포르투갈, 그리스 등 남부유럽 국가들은 1995-2005년 유럽연합 평균에 비해 약 0.7-1.5% 높은 연평균 1인당 GDP 성장으로 유럽연합의 평균에 수렴되었다. 특히 1985년 유럽(EU15=100) 평균의 69%에 불과했던 아일랜드는 같은 기간 유럽연합 평균에 비해 4% 이상의 높은 연평균 성장과 더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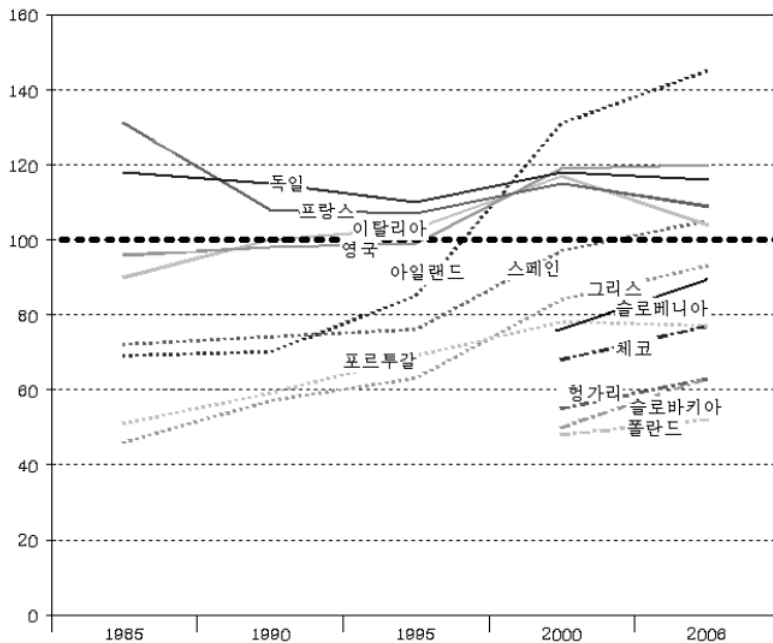


그림 3. 주요 회원국의 1인당 GDP 추이

주 : 1인당 GDP는 구매력(PPS) 기준, 1985-1995(EU=15), 2000-2006(EU=27)

어 2006년 1인당 GDP는 유럽(EU27=100) 평균의 145%로 2배 이상의 경이적인 속도의 수렴되었다. 최근 유럽연합에 가입한 중·동부유럽 회원국들 역시 2000년 1인당 GDP는 유럽 평균(EU27=100)의 26-55%로 커다란 격차를 보였으나 가입 이후 유럽평균에 수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서부유럽국가와 인접한 체코와 슬로베니아의 1인당 GDP는 유럽 평균의 77%와 88%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남부유럽 및 중·동부유럽 회원국의 경제격차 수렴은 저소득 신규회원국에 대한 유럽연합의 구조기금 지원정책과 시장통합에 따른 선진 회원국으로부터의 대규모 투자유입, 교역의 확대와 깊은 관련이 있다. 유럽연합의 구조기금 지원이 저소득 회원국의 경제성장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저소득 회원국의 경제성장에 큰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2007-2013년 프로그래밍 기간 전체 구조기금 약 3천 5백만 유로 가운데 약 51%는 중·동부유럽 신규가입국에, 22%는 남부유럽 회원국에 집중 지원되었다. 구조기금은 유럽연합 전체 GDP의 0.36%에 불과하지만 소득수준이 낮은 회원국의 GDP에서는 매우 중요한 몫을 담당하였다.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에서는 구조기금 지원이 전체 GDP의 약 5%를 차지하였으며 기타 중·동부유럽 회원국에서도 GDP의 약 3.5%를 담당하였다. 그리고 그리스와 포르투갈에서도 GDP의 1-2%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유럽연합의 구조기금 지원이 저소득 회원국의 경제성장에 큰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회원국내 지역간 경제격차 변화

지역간 경제격차는 회원국가간뿐만 아니라 회원국의 국내 지역간에도 나타난다. 회원국의 국내 지역간 경제격차는 회원국가간 경제격차의 수렴 경향과는 달리 주목할 만한 수렴현상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1인당 GDP의 최저지역과 최고지역의 격차는 지난 10여 년 동안 크게 확

대되었다. 1993년 서부유럽 회원국의 1인당 GDP의 최저지역과 최고지역의 격차는 30-100%였으나 2006년에는 60-250%로 크게 확대되었다. 격차가 감소한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최고지역과 최저지역간 경제격차는 증가하였다. 특히 영국(+185)과 벨기에(+42), 스웨덴(+30)에서 지역간 격차가 크게 확대되었다. 남부유럽 회원국의 국내 지역간 격차 역시 1993년 30-50%에서 2006년에는 40-70%로 확대되었다. 국내 지역간 격차는 높은 경제성장을 이룬 스페인(+19)과 그리스(+41)에서 크게 증가하였다. 중·동부유럽 회원국은 국내 지역간 격차의 변화를 알 수 없으나 2006년 현재 30-110%의 높은 회원국 국내 지역간 경제격차를 보인다.

이와 같은 회원국 국내 지역간 경제격차의 확대는 기금의 지원으로 경제격차를 해결하기 어려운 입지 측면의 지역적 차별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회원국 국내 지역에서 두드러진 성장을 보이는 지역은 대부분 수도권 지역이거나 첨단산업 및 연구개발에 전문화된 지역들이다. 이들 지역은 지역인프라와 혁신능력, 인적자원 등의 유리한 입지여건으로 기업활동을 집중시키고 있다. 기업활동의 집중은 규모의 경제와 거래비용의 상호작용으로 스스로 강화하면서 성장지역 → 대규모 시장 → 기업유인 → 노동수요 증가 → 성장지역 → ...으로 이어지는 누적적 순환적 인과관계에 의해 강화되고 있다. 이에 반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지여건을 지닌 낙후된 지역은 기업의 유출과 노동수요의 감소로 지역경제가 저성장하거나 오히려 쇠퇴하고 있다. 즉, 지역정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입지측면의 지역간 차별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성장지역과 낙후지역간 경제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3. 주요 회원국의 국내 지역간 1인당 GDP 격차 추이

	회원국내 지역별 1인당 GDP					변동 (2006- 1993)	
	1993 (EU15=100)		격차 (최고-최저)	2006 (EU27=100)			격차 (최고-최저)
	최저지역	최고지역		최저지역	최고지역		
벨기에	80 (Brabant Wallon)	182 (Bruxelles)	102	82 (Hainaut)	230 (Bruxelles)	148	+46
네덜란드	99 (Flevoland)	132 (Groningen)	33	100 (Flevoland)	175 (Groningen)	75	+42
독일	84 (Lüneburg)	190 (Hamburg)	106	80 (Brandenburg)	200 (Hamburg)	120	+14
프랑스	78 (Corse)	166 (Ile de France)	88	80 (Corse)	170 (Ile de France)	90	+2
이탈리아	60 (Calabria)	131 (Lombardia)	71	65 (Campania)	135 (Bolzano)	70	-1
영국	74 (Merseyside)	144 (Greater London)	70	80 (West Wales)	335 (Greater London)	255	+185
덴마크	112(전지역)		-	88 (Sjælland)	158 (Hovedstaden)	70	-
스웨덴	89 (Oestra)	119 (Stockholm)	30	105 (Östra)	167 (Stockholm)	62	+30
핀란드	72 (Itä-Suomi)	126 (Ahvenanmaa)	54	85 (Itä-Suomi)	145 (Åland)	60	+6
오스트리아	71 (Burgenland)	161 (Wien)	90	85 (Burgenland)	168 (Wien)	83	-7
스페인	55 (Extremadura)	99 (Balears)	44	74 (Extremadura)	137 (Madrid)	63	+19
포르투갈	42 (Madeira)	96 (Lisbon)	54	62 (Norte)	106 (Lisbon)	44	-10
그리스	46 (Ipeiros)	72 (Sterea)	26	63 (Dytiki Ellda)	130 (Attiki)	67	+41
아일랜드	81(전지역)		-	105 (Border, Midland & Western)	165 (Southern and Eastern)	60	-
폴란드	-	-	-	37 (Lubelskie)	85 (Mazowieckie)	48	-
체코	-	-	-	62 (Moravskoslezsko)	162 (Praha)	100	-
슬로바키아	-	-	-	40 (Východné)	148 (Bratislavský)	108	-
헝가리	-	-	-	39 (Észak-Alöld)	108 (Közép-Magyarország)	69	-
슬로베니아	-	-	-	75 (Vzhodna)	110 (Zahodna)	35	-
루마니아	-	-	-	25 (Nord-Est)	70 (Bucureşti)	45	-
불가리아	-	-	-	30 (Severen)	60 (Yogozapaden)	30	-

주: **진한 지명**은 각 회원국의 수도 또는 수도권 지역임.

자료: European Commission, 1996, 2009

5. 결론

유럽연합의 지리적 확대와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점 중의 하나는 확대과정에서 발생한 지역간 발전격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여 통합을 확대·심화시켜 나갈 것인가이다. 지역간 발전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격차가 심화되면 지리적 확대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결속력 약화와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 증가 등 확대에 의한 부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은 지리적 영역을 확대시키는 동시에 발생하는 지역간 발전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지역정책을 실행해 왔다.

유럽연합의 지역정책은 지리적 확대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소득 회원국과 지역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고 신규회원국의 가입을 회유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1970-1980년대 저소득의 아일랜드, 그리스,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가입과 단일시장의 형성에 따라 저소득 회원국 및 지역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유럽지역개발기금(ERDF)과 결속기금(Cohesion Fund)이 설립되었다. 또한 1990년대 낮은 인구밀도와 수산업 비중이 높은 스웨덴과 핀란드, 오스트리아 및 노르웨이와 스위스의 가입을 회유하기 위한 수산업 지도를 위한 재정수단기금(FIFG)이 설립되었고 인구희박지역개발 지원이 지역정책의 목표에 포함되었다. 지역정책이 지리적 영역의 확대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소득 회원국과 지역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고 신규회원국의 가입을 회유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됨으로서 지역정책의 목표와 지원대상지역은 확대되고 기금지원은 광범위하게 분산되었다.

최근 저소득의 중·동부유럽국가의 대규모 가입에 따라 지역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정책이 변경되었다. 우선 광범위하게 분산된 지역정책의 목표가 크게 통합되고, 지역구분에 의한 지원이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지원대상지역을 순차적으로 축소시키는 정책을 도입되었다. 또

한 확대된 지리적 영역에서 지역간 협력을 촉진시켜 지역간 결속을 강화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유럽연합의 지역간 발전격차는 회원국간 격차는 수렴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거시 지역간 격차는 극화되고 회원국 국내 지역간 격차는 심화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유럽연합의 지역정책이 회원국간 경제격차의 완화에는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거시지역과 국내지역은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정책에도 불구하고 발전격차가 증가될 수밖에 없는 입지측면의 지역간 차별성으로 인해 경제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회원국간 경제격차의 수렴은 저소득 회원국에 대한 기금지원정책뿐만 아니라 대규모 투자유입과 교역증가에 따른 높은 경제성장과 관련된다. 이에 반해 거시지역의 극화현상과 국내 지역간 격차의 심화는 성장의 선발이익을 지닌 지역의 우월한 입지여건이 기업을 유인하는 구심점으로 작용하여 기업활동을 집적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즉 지역 인프라와 혁신능력, 인적자원 등 지역경쟁력 요소의 지역적 차이로 지역간 경제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미시지역간 발전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낙후지역에 대한 인프라 확충과 지역혁신체제 구축과 인적자원의 축적을 위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정책이 요구된다.

주

- 1) 유럽연합은 로마조약에서 '회원국간 경제적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공동체 내 다양한 지역과 낙후지역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여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할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 2) 신고전경제학에 기반한 일부 학자들은 최근 단순히 지역정책의 불필요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비공간적인 사회적 균형정책이 공간적 지역정책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 3) 노르웨이는 유럽연합 가입을 위한 국민투표를 1972년과

1994년 실시하였으나 경제적 독립성의 유지와 연안 석유 자원 및 어족자원에 대한 통제권의 상실 우려 등으로 부결되었다. 스위스 또한 1992년과 2001년 유럽연합 가입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였으나 전통적인 중립정책 유지와 국민 여론의 분열, 스위스 특위의 합의적 의사결정 방식 등으로 인해 부결되었다. 그 결과 1995년에는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 3개국만 유럽연합에 가입하였다.

4) 유럽연합은 공동지역정책 수립을 위해 유럽연합지역분류 통계체계(NUTS)를 확립하여 지역을 3계층으로 구분하였다. NUTS(EU 27)는 NUTS 1(97개), NUTS 2(271개), NUTS 3(1303)으로 이루어져 있다.

참고문헌

- 김광익·장철순, 2000, “유럽연합의 지역정책,” 국토 229, pp.94-100.
- 김영순, 1996, “지역통합과 역내 지역 불균형: 유럽연합의 경우,” 지역연구 5(3), pp.197-222.
- 김은경, 2009, EU 지역정책의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서울: KIEP.
- 문남철, 2004, “유럽연합 형성과 역내 직접투자 흐름,”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0(2), pp.371-388.
- 문남철, 2004, “EU의 중·동부유럽으로의 확대와 투자입지 및 경제공간의 변화,”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0(4), pp.698-712.
- 문남철, 2009, “유럽연합 확대와 역내 교역흐름 및 교역구조 변화,”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2(4), pp.406-420.
- 변필성, 2007, “EU의 구조기금: 2007-2013년,”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0(1), pp.111-129.
- 이갑수, 1997, “유럽연합의 지역경제문제-지역간 경제력격차를 중심으로,” 무역학회지 22(2), pp.1-22.
- 이중서, 2007, “EU 지역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구조기금 개혁과정을 중심으로,” 유럽연구 25(2), pp.119-152.
- 정홍열, 2001, “유럽연합 지역정책의 발전과 전망,” 유럽연구 13, pp.101-131.
- Armstrong, H. W., 1994, EC Regional Policy, in El-Agraa, Ali M.(eds.), *The Economics of the European Community*, New York: Harvester Wheatsheaf, pp.349-375.
- Bachtler, J. and G. Gorzelak, 2007, “Reforming EU Cohesion Policy, A reappraisal of the performance of the Structural Funds,” *Policy Studies* 28(4), pp.309-326.
- Bachtler, J. and I. Turok, 1997, *The Coherence of EU Regional Policy: Contrasting Perspectives on the Structural Funds*, London: Kingsley.
- Boldrin, M. and F. Canova, 2001, “Inequality and Convergence in Europe’s Region: Reconsidering European Regional Policies,” *Economic Policy*, pp.207-253.
- Capron, H. 2007, “Politique de Cohésion et Développement Régional,” *Brussels Economic Review* 50(1), pp.113-133.
- Ertur C. and W. Koch, 2005, “Une analyse exploratoire des disparités régionales dans l’europe élargie,” *Région et Développement* 21, pp.65-91
- European Commission, 1995, *Structural Funds and Cohesion Fund 1994-1999, Regulations and Commentaries*, Luxembourg.
- European Commission, 1996, *Statistics in Focus(Regions 1996-1): Per Capita GDP in the European Union’s Region*, Luxembourg.
- European Commission, 2000, *Structural actions 2000-2006, Commentaries and Regulations*, Luxembourg.
- European Commission, 2006, *Fourth progress report on cohesion: The Growth and Jobs Strategy and the reform of European cohesion policy*, Luxembourg.
- European Commission, 2007, *Cohesion policy 2007-2013, Commentaries and official texts*, Luxembourg.
- European Commission, 2009, *Eurostat regional yearbook 2009*, Luxembourg.
- Geppert, K. and A. Stephan, 2008, “Regional disparities in the European Union: Convergence and agglomeration,” *Regional Science* 87(2), pp.193-217.
- Heidenreich, M. and C. Wunder, 2008, “Patterns of regional Inequality in the Enlarged Europe,”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4(1), pp.19-36.
- Le Gallo L. and C. Ertur, 2003, “Exploratory Spatial Data

Analysis of the Distribution of Regional per Capita GDP in Europe, 1980-1995," *Papers in Regional Science* 82, pp.175-201.

López-Bazo, E., Vayá, E., Mora, A. J. and J. Suriñach, 1999, "Regional Economic Dynamics and Convergence in the European Union," *Annals of Regional Science* 33, pp.343-370.

Sapir, A., Aghion, P., Bertola, G. and M. Hellwig, 2004, *An Agenda for a Growing Europe: The Sapir Repor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http://europa.eu.int>

교신: 문남철, 361-742, 충북 청주시 모충동 무심서로 231
서원대학교 사범대 지리교육과, 전화: 043-299-8380,
팩스: 043-299-8380, 이메일: mnc83@hanmail.net

Correspondence: Nam-Cheol Moon,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Seowon University, 241
Musimseoro, Heungdeok-gu, Cheongju, Chungbuk,
361-742, Korea, Tel: +82-43-299-8380, Fax: +82-43-
299-8380, e-mail:mnc83@hanmail.net

최초투고일 2010년 7월 30일

최종접수일 2010년 9월 1일

EU Enlargement: Regional Policy and Regional Disparity

Nam-Cheol Moon*

Abstract : The european union used the regional policy for a compensation for a economic loss of the underdeveloped member countries and for a conciliation of the new member countries with a geographical enlargement. As a result, the objet of regional policy and the support eligible regions of structural funds increased.

According to the central and eastern europe countries entry into the european union, the european union modified the regional policy: the integration of the dispersed objects of regional policy into the 3 objects, the reduction of the support eligible region of structural funds and the promotion of the interregional cohesion policy.

The development disparities of the between the member countries converged. But the inter-local development disparities of a intra-member country dispersed. This tendency means that the regional policy of the european union contributed for the reduction of development disparities between the member countries but produced no effect on the diminution of the inter-local disparities of a intra-member country because of the regional differentiation of locational conditions.

Keywords : EU, regional policy, regional disparity

* Lecture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Seowon University